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였다. 한국전쟁 중 양국이 함께 치렀던 인천상륙작전, 폭집(pork chop hill) 전투, 서울 탈환 등의 전투를 직접 거명하며 미국의 희생을 상기시켰다. 방한 첫날 찾아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60년 이상 이어지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성취에 대한 경의였다. 6·25전쟁 후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북한과의 비교를 통해 강조했다. 1988년 자유총선과 최초의 문민 대통령 선출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의 민주화 운동을 평가했다. 한국의 과학자, 작가, 골프 선수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이룬 성취를 열거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자신이 소유주인 골프장에서 개최된 LPGA 대회에서 우승한 박성현 선수를 직접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친숙함을 부각시켜 한국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도가 담겨있다.

셋째는 동맹과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북한 체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우려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경고했다.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다. 북한이 개발하는 무기로 인해 북한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강력한 경고는 하되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읽힌다. 전반적으로 초창국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단호한 경고도 담은 무난한 메시지였다. 헬기를 타고 오산, 평택, 서울을 오가면서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동맹국의 국민이 살고 있는지 보았을 것이다. 이곳에서 위태롭게

유지되는 평가가 깨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메시지만 있고 해법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부의 과제도 선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기존의 강력한 제재에 머물러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입구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높은 벽을 세워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라고 종용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노력이 갖고 있는 한계다.

미국이 대화의 시작부터 북한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CVID) 핵 폐기를 요구한다면, 북한의 대응은 자명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이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상태에서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을 쟁구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은 김정은 체제가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보장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중간까지라도 가야 한다. 우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핵 동결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긴 대화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될 마지막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완성까지 계속 나갈 것이다. 도발을 반복하며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먹구름을 점점 거깝게 불러올 것이다.

북한에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중공영하는 길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미국에는 북한의 핵을 우선 동결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자고 권유해야 한다. 중국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정책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쉽지 않다. 하나하나 거의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한 과제이다. 외교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왔던 역사적 경험이 풍부하다. 강력한 힘은 평화를 지킬 수 있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역사적 악순환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종교칼럼

위령 성월(慰靈 聖月)



변 찬 석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정사목

친 인물도 있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죽음에 피할 수는 없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은 분명한 순리(順理)이다. 그러나 죽음이 단순히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죽음은 커다란 고통이었지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는 것은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고귀한 의미를 지닌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삶이란 죽음으로의 점진적인 굴복이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할당된 나날 중 한 부분을 매일 죽음에 바치고 있다"고 그의 저서 '신곡론'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톨스토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죽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죽음은 보편적이고 불가피(不可避)하다는 것과 함께, 대체불가(代替不可)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면서도 죽음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또한 죽

음을 잘 준비하면서 생활한다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죽었다. 독살 의혹 속에 치러진 그의 장례는 3·1운동이 일어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3·1 운동은 일본의 비인도적인 진압으로 실패로 끝났으나, 일본의 가혹한 무단 통치 아래서도 꺾이지 않는 자주민의 저력을 국내외에 떨쳤고,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60년 3월 15일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날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 경찰이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7명이 사망하고 870명이 부상을 당했다. 4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경 마산 시위 때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상고 학생인 김주영의 시체가 바다에 떠올라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부정선거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승만 자유당의 장기 집권을 막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비록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진압당했지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고,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인 박종철이 경찰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고, 6월 9일에는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 당하다 7월 5일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노태우는 6·29 선언을 하게 되었고, 제 6공화국 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령 성월은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이다. 또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꿈꿔왔던 세상을 우리도 함께 꿈꾸는 시간이기도 한다. 그래서 위령성월 감사기도문에는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를 증명해 주셨다. 진정한 삶은 어쩌면 죽은 뒤에 가능한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하느님과의 일치는 죽음을 때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가 믿고 바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의미 있는 사건이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더욱 값지게 다가오는 것이다.

기 고

농업의 가치



김 광 태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증가하고 있다. 우리 농촌이 갖난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듣기 어려울 만큼 갈수록 왜소화되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엄중한 현실 속에서 과연 농업과 농촌을 마냥 경시하고 외면만 해도 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차체에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여 알아본다.

먼저, 농업은 식량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한다. 농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때문에 쌀을 포함한 식량 자급을 확보는 사회 안전망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지금 전 세계는 안정적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식량 무기화가 현실시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식량 안보적 기능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령 모든 상품이 개방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장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농업

을 외면하여 영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농산물 수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식량 종속국' 내지는 '농업 식민국'으로 전락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식량 자급 없이는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노벨 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주장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농지는 단순히 식량 생산 수단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농지는 생물 다양성의 유지 기능과 아울러 물 관리를 통한 홍수 예방은 생명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 눈은 거대한 저수지처럼 여름엔 홍수 조절 기능을 갖는다. 춘천댐의 1회 저수량을 약 1억 5000만㎥으로 추산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눈은 이런 댐을 24개나 보유하는 것과 맞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눈에 가뭄된 물은 대부분 땅속으로 침투되어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공급해 주고 있다.

게다가 농지는 대기를 정화하는 '산소 발생기'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환기해야 한다. 눈에서 자라는 벼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대기를 정화하며 대기온도를 낮춰준다. 눈은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농사와는 달리 벼농사는 토양 중에 무기 염류의 집적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눈은 연작을 계속해도 끄떡없는 새 생명의 토양이 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농촌은 전문문화와 특히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남해 등지의 '다람이 논' 풍경은 농촌이 빛을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유럽에서는 농민을 국토의 자연 경관을 관리하는 '정원사(Gardener)'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농업이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하다. 단지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다원적 기능을 가진 산업이다. 따라서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공공재적인 가치 기준으로 다시금 재조명되어야 마땅하다. '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그동안 농업을 소홀히 여기거나 홀대 시 하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인식의 대전환이 긴요하다.

社 說

여수 경도 혈값 매각 논란 타산지석으로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전남 관광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경도 매각을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라면 우월한 조건에서 높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도로서는 혈값 매각으로 대박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편입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도 개발 투자자인 미래에셋은 세금·부담금 감면 등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육지에서 경도로 들어가는 연륙교 건설 사업비(620억원) 중 일부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은 2024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해 6성 호텔을 짓고, 2029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입해 수상빌라와 워

터파크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급 해양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해상케이블카나 마리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과 연륙교 건설로 인해 추진이 한결 용이해졌으며, 자연히 경도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전남개발공사가 지난해 7월 경도 매각 과정에서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추진 및 연륙교 건설 계획 등을 공개했다더라면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당연히 매각 대금이 크게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경도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채 매각에만 급급한 나머지, 매각 계약시 3422억원보다 고작 1억 원만을 더 쓴 미래에셋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말았다. 크고 작은 개발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지자체들은 여수 경도의 매각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고용 외면해서야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고용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 산하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법적 비율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는 기관은 열 곳 중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도 출연·출자 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을 두는 기관 10곳 중 전남 신용보증재단(3.2%)을 뺀 9곳이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를 보면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을 두는 기관은 장애인을 3.2% 이상 고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관광재단 등 네 곳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나머지 기관 중 생물산업진흥원은 2.8%, 강진의료원 2.3%, 순천의료원 2.0%, 전남개발공사 1.7%, 전남테크노파크 1.4%의 고용률을 보였다.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실시됐다.

장애인들은 일방적인 배려나 과잉 친절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발휘해 경제 주체로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할 뿐이다. 취업은 생계와 직결되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립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큰 덕목을 저버려선 안 된다. 장애인 고용에 공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을 위한 안마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있지는 않은가.

無 等 鼓

서구 일부 국가는 낙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임신 갈등상담소의 소견서가 있으면 12주 미만 태아 낙태도 가능하다. 영국 낙태법은 의사 2인이 인정하면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태아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 269조 1항에는 '부녀가 악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는 '자기 낙태죄' 규정을 두고 있다. 270조 1항에도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중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동의 낙태죄'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동의 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한 조산사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한'이라며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판단이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과정은 의외로

재판관들은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

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태아의 발달 정도를 봐서 일정 부분 허용하지는 절충론인 셈이다.

5년 전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가 최근 현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섰다. 재판관들이 원치 않는 입신에 고통받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중점을 둔 판단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